

“ILO 핵심협약 선 비준 후 입법하라”

경사노위 논의 무산 위기에 양대노총, 정부에 결단 촉구

단결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가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양대노총이 ‘선(先) 비준 후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 비준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실업자와 해고자, 교사 등의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철폐하는 ILO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 입장 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헌법 60조에 따라 국제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해 선 비준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경사노위 논의에 진전이 없자 선 비준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선 비준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ILO 결사의자유(87호·98호) 협약을 비준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별도 입법 보완 없어도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비준한다면 선 비준 후 입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1998년에 비준한 ILO 협약 138호(아동노동 금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 개정 과제를 명시하고 비준 후 법 개정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정부가 선 비준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협상과정에서 경영계가 요구한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은 노사 이해가 첨예하게 갈린 사안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관련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비준을 시도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

김지현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여섯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해고자의 단결권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에 대한 정부의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 “ILO 핵심협약, 입법보다 비준 먼저”

EU, 계속되는 압박 해법은…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한국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돌아가자, 노동계 등의 ‘선 비준 후 입법’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는 11일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한 핵심협약은 별도의 국내 입법 조치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협약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며 “선 비준 후 입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 제6조 제1항, ‘국회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 제1항이 그근거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은 절차상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면 국내법과 똑같은 ‘지위’를 갖게 되므로, 비준부터 먼저 하고 이와 충돌하는 관련 국내법은 그 뒤에 개정하면 된다는 얘기다. 핵심협약 관련 법률로는 해직자 등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노동조합법,

민주노총 “비준 거치면 국내법 효력

정부·사용자 ‘선 입법’ 고집은 평계”

한국노총도 “정부가 결단 내려야”

경사노위, 오늘 대화 지속여부 결정

전교조·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등이 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아이엘 오 긴급 공동행동’과 국회 노동포럼 ‘헌법33 조위원회’가 함께 연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부와 사용자의 ‘선 입법 후 비준’ 주장은 핵심협약 비준을 거부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핵심협약 가입을 권고한 일을 상기시키며 “고용부 장관이 인권위 권고가 있은 지 넉달이 지난 현재까지, 비준안 마련과 국무회의 심의 절차 회부 등 협약 비준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국가인권위법 등 법령을 위반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저희는 먼저 비준

하고 이것이에 맞게 국내법을 정비해도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단체의 억지 주장으로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 비준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대통령이 비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1년 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된다. 선 비준이 국회의 법 개정을 위한 우호적인 측진제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논의’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선 입법에 매달려 지지부진한 논의를 거듭하는 대신 핵심협약 비준부터 하자는 데 무게를 실은 셈이다. 경사노위는 12일 오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 전체회의를 열어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사정 대화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쪽은 “핵심협약 자체가 워낙 쟁점이 많은 사안인데 관련 법안 처리도 안 된 상황에서 국회가 비준 동의를 먼저 해줄지 모르겠다. 선 비준 후 입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라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경향신문

2019년 04월 12일 금
010면 사회

한국노총도 “투쟁”

“노동법 개악 강행 땐 사회적 대화 전면중단”

사회적 대화가 진통을 겪고 있다. 투쟁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경영계 사이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운신 폭도 좁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11일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일 경우 사회적 대화를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 합의가 훼손되고 최저임금법이 또다시 개악되는 등 노동법 개악이 강행될 경우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즉각적인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상황에서 한국노총마저 불참할 경우 사회적 대화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경사노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좌초 위기에 놓인 것 역시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노동계의 숙원 사업이자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일찍이 노사정 논의를 시작했지만 경영계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김주영 위원장은 “사용자 단체의 억지 주장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 비준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선 비준’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9년 04월 12일 금요일 031면 오피니언

ILO 협약, 선 비준 후 입법 적극 검토해야

결사의 자유·단결권 보장, 강제노동 폐지 등 국제 노동기구(ILO) 4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결렬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최근까지 노사정 부대표들 간 연쇄회동을 갖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경영계의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 주장에 막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경사노위 전체회의가 남아 있지만 의미있는 결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상 노동관련 의무이기도 하다. 비준이 늦어지면 전문가 패널 권고안 등에 따른 통상압력을 물론 한국의 국가신뢰도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ILO 정신에 반한다.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 33조와도 배치된다. 한국은 28년간 4개 협약 비준을 미루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집하는 것은 누가 봐도 ‘판’을 깨자는 것이다. 경영계의 무책임한 태도는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스럽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선 비준, 후 입법’이다. 경영계와 일부 야당을 제외한 다수가 이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고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ILO 긴급 공동행동’은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 일부도 “선 비준, 후 입법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선수 대법관도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선 비준, 후 이행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서둘러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 동의절차를 거친 협약 비준은 그 자체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럴 경우 EU와의 외교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 무엇보다 노조 조직률 11%에 불과한 한국의 노동자가 ‘노조 할 권리’라는 기본권을 회복하는 일임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매일경제

2019년 04월 12일 금요일 A12면 경제

한노총·경총, ILO 장외싸움 돌입

경사노委 합의 사실상 불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장외 싸움이 본격화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는 가능한 행정상 조치를 모두 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유럽연합(EU) 측의 통상압력이 아닌 우리나라 특수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주권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맞섰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마무리한다. 위원회 예선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국회로 전달하거나, 경사노위 운영위원회로 올리는 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회적 대화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장외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무관한 파업 중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등을 주장하며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논의가 무위로 끝나면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先) 비준’ 절차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경총은 지난 9일 열린 EU 집행위원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브리핑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EU 측 요구가 경영계 입장과 요구사항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동계 전략으로 활용돼선 안 되며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이슈를 균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진호 기자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한국당 17명 ‘노조 견제법’ 발의

자유한국당은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조 견제법’을 11일 발의했다. 현 정부 들어 비대해진 노조 권력을 법적으로 견제해 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와 일자리 감소를 막겠다는 취지다.

◆ 한국당 “사업주 영업권도 보장해야”

추경호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7명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일부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조의 쟁의행위(파업)로 조업이 중단됐을 때 해당 사업과 무관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고용(대체근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근로는 파업 때 사측이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 중 하나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선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

추 의원은 “현행법은 ‘노조 보호’에 방점을 둔 나머지 사업주에게 보장된 영업·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업주의 영업권

“비대해진 노조 권리 제동”

추경호 “현행법은 노조보호 차중 사업주 영업·조업 자유 보장 필요”

사업장내 쟁의행위 전면 금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도 법안에 포함

한국당 “4월 국회서 심사 시작”

정부가 ILO 핵심 협약 비준 위해 제출한 개정안과 함께 심사 추진

을 대등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10년간 430회가 넘는 파업을 벌였다. 회사 측 분석에 따르면 파업에 따른 누적 생산 차질은 물량으로는 52만9000대, 금액으로는 9조7000억 원에 달한다.

개정안에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노동

노동조합법·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	현행
대체근로	허용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주만 처벌
사업장 내 쟁의행위 (파업)	금지	부분적 허용
쟁의행위 찬반 투표	파업 기간 사전 공고	규정 없음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2년

자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조합법은 파업 때 생산 관련 시설과 전기 통신설비 등 일부 시설에 한해서만 노조 점거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선 사업주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또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할 때 파업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파업을 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사업장 운영에 대한 사업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민생탐방 나선 황교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가 ‘민생 대장정’의 일환으로 11일 부산 영도구 광강이 생활문화센터에서 조선기자재·선박 수리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ILO 협약 핵심 법안과 함께 논의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해 달라’는 경제계 요구도 반영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민사 책임만 지우고 있다. 추 의원은 “한국 노조는 사업주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2017년 기준으로 노조가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한 사건의 기각·각하율은 81.1%에 이른다. 노조가 그만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당은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노조 견제법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당이 작년 말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같이 올

려 놓고 심사를 벌일 것”이라고 했다.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작년 12월 28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주는 게 골자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추 의원은 “노조 편으로 기울어져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성장도 요원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에 끌려다니다시피 한 여당이 경제계 요구사항이 반영된 노조 견제법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은 올초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도 논의됐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환노위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도 걸려 있어 노조 견제법에 대한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현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

현재 “직원 부당노동행위 때 회사도 처벌하는 건 위헌”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 부과 안돼”
영업주 의무 다했다면 처벌 부당

현법재판소가 소속 종업원이 부당 노동 행위를 해서 처벌될 때 소속 법인에 대해서도 같이 처벌을 받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자동차 제조회사인 A주식회사에서는 일부 직원이 노동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에 개입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직원들과 함께 기소 됐다. 노동조합법 94조는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A사는 2017년 1심 법원인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영업주인 법인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아닌지와 관계없이자동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7년 10월 현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현법재판소는 1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 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를 근거로 들었다. 현재는 “해당 조항은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사법상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영업주인 법인이 종업원들의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종업원들의 잘못으로 영업주까지 같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東亞日報

2019년 04월 12일 금요일 A10면 종합

임직원 부당노동행위때 회사 처벌 조항 위헌

현재 “임직원 철저 관리했는데도 범죄 발생땐 회사에 책임 못물어”

회사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때 회사(법인)도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하도록 한 현행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현법재판소는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노동조합법 94조가 위헌인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며 임직원 4명과 현대차 법인을 2017년 5월 기소했다. 현대차 측은 회사 임직원이 불법 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94조가 너무 지나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형벌의 책임주의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현재에 제정했다.

현재는 “회사의 임직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회사의 독자적 책임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임직원이 범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임직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했는데도 범죄가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현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현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노조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모자보건법 개정 작업 속도낼 듯… 과거 처벌은 소급 적용 안돼

공 받은 국회… 입법 어떻게 하나

민주당 “조속 개정” 한국당 “후속 조치”

정의당 “임신 12주 내 허용” 법안 준비

사회·경제적 사유 허용 신규 조항 가능

수사·재판 ‘스톱’… 무혐의·무죄 가능성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도 현재 결정을 존중해 입법화에 나서겠다고 밝혀 법 개정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낙태 허용 시기와 기준이 쉽게 합의될 것 같지는 않다. 만일 국회가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행 처벌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우선 정비해야 할 법은 위헌 판결을 받은 형법과 낙태 허용이 가능한 예외기준을 명시한 모자보건법이다. 모자보건법은 유전학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때, 임신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만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을 개정한다면 임신 12주, 24주, 36주 등 임신 주기에 따라 낙태 허용 범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의당은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에 임산부 요청에 따라 의사 상담을 거쳐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갈 수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2018 인공임신증절(낙태) 실태 조사(여성 1만명 대상)’에서 낙태를 한 이유(복수 응답)로 33.4%가 ‘학업, 직장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2.9%는 ‘경제 상황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라고 답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낙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혼모나 원정 낙태 문제, 불법 낙태 시술로 인한 건강 문제 등 현재의 낙태 범리 체계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면서도 “낙태의 기간만 제한 할 것인지 아니면 낙태를 하는 사유나 여건까지 제한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전까지는 낙태 시술을 한 여성과의료진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일단 중단되거나 진행하더라도 무혐의 또는 무죄 선고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낙태죄 위반 사건 84건 가운데 13건만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1건이 검찰에 접수됐지만 기소된 사건은 없다.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선 이날 결정이 소급 적용되진 않지만, 대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현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ilee@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낙태죄 기소 현황 (단위: 명)			낙태죄 1심 선고 현황 (단위: 명)						
검찰 접수 구속(불구속)	악식명령	2014년	사건 분류		집행유예 선고유예 징역 벌금 기타 합계				
			낙태	의사 등의 낙태	1	2	1	4	
112	0(7)	2015년	의사 등의 낙태	2	2				4
104	1(15)		낙태	3		2			5
79	0(23)	2016년	의사 등의 낙태	5	4				9
62	0(8)		낙태	3	2	2	1*		8
84	0(13)	2017년	의사 등의 낙태	10	5	2			17
21	0		낙태	1	3	1	1		6
		2018년	의사 등의 낙태	1	7				8
			낙태		1		2	1**	4
		2019년 1~3월	의사 등의 낙태						0

* 정식재판청구 취하

** 소년부 송치

〈자료: 법원행정처〉

근로자 조세격차 상승폭 OECD 최고

〈실질세부담〉

작년 23%… 전년비 0.5%p ↑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격차(Tax wedge·실질세부담)’ 상승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OECD 회원국 근로자 가운데 우리나라 근로자 세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난 셈이다.

OECD가 11일 공개한 ‘임금소득과 세 2019년 보고서’(Taxing Wages 2019)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혼 단독가구 기준 조세격차는 23.0%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0.5%포인트 가운데 소득세는 0.34%포인트, 근로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분이 0.08%포인트, 사용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분이 0.07%포인트를 차지했다.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명목임금 인상에 따른 실효세율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격차는 인건비 중 근로소득과 관련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등)이

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 등 올라

에스토니아·美·헝가리 등은 줄어

자녀 둘 외벌이 가구 세 혜택 미미

미혼 단독가구와 별반 차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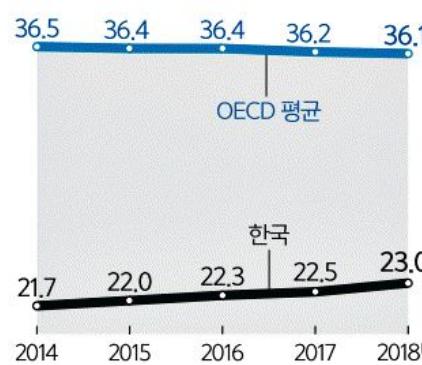
조세격차비율은 31번째로 낮아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수치로, 값이 클수록 세금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일 반적으로 조세격차가 클수록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조세격차 비율이 OECD 36개 회원국 중 31번째로 세금부담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다. 향후 복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조세격차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조세격차 19.5%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OECD 회원국 평균 36.1%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지난해 OECD 36개국 중 22개국에서 조세격차가 늘었고 14개 국은 감소했다. 조세격차가 늘어난 국

OECD 회원국, 우리나라 조세격차 추이 (단위: %, 미혼 단독가구 기준)



조세격차(Tax wedge)란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해 부담하는 노동비용과 노동자가 실제 받는 임금, 즉 실질 임금 간의 차이를 말함. 실질세부담으로 표현됨. 조세격차가 클수록 노동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text{조세 격차}(\%) = \frac{\text{조세+사회보장기여금(근로자 부담분+ 사용자 부담분)-현금보조금}}{\text{노동비용}} \times 100$$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재정정보원

가의 경우 전년 대비 0.5%포인트가 증가한 우리나라 증가율이 높았지만 조세격차가 줄어든 나라는 에스토니아가 2.54%포인트, 미국이 2.19%포인트, 헝가리가 1.11%포인트, 벨기에가 1.09%포인트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OECD는 에스토니아와 미국의 경우 소득세 개혁의 영향이 컸고, 헝가리와 벨기에의 경우 사용자 사회보장기여금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OECD 평균 조세격차는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하며 4년 연속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녀 세제혜택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구의 조세격차는 21.0%로 미혼 단독가구(23.0%)와 2.0%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근로자 1명이 100만원을 번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미혼 단독가구는 세금을 23만원 내고,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구는 21만원을 내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이 2만원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OECD 평균은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구의 조세격차가 26.6%로 미혼 단독가구(36.1%)와의 격차가 9.5%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 퇴직자를 최대한 ‘임금노동 영역’에 머물게 해야 한다

③·끝 자영업 사각지대, 해법은

글 싣는 순서

- ① 위기의 뿌리 ‘중고령’
- ② 점점 가난해지는 자영업자

**고용 연장·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 경우에는
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

중고령 퇴직자의 자영업 진출은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위험한 도전’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시작한 창업은 폐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다. 만 45~64세 자영업자는 같은 연령대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총소득이 19.9~30.2% 낮다. 이에 따라 중고령 자영업 대책은 이들을 최대한 오랜 시간 ‘임금노동 영역’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안정된 직장에서 자영업 시장으

로 내몰리는 시기를 늦추자는 것이다. 이후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

11일 한국노동연구원 이승렬 선임연구위원과 손연정 부연구위원의 ‘중고령 자영업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5~64세 중고령층 자영업자의 1998~2016년 연평균 균등화 가구소득(총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소득)은 2000만원 초중반대에 그친다. 반면 중고령 상용직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3185만원이다. 중고령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저소득’에 시달리고 있다.

때문에 중고령 자영업자 대책의 첫걸음은 ‘고용 유지’다. 이들이 ‘임금노동 영역’에서 밀려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중고령층이 창업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은 만큼 조금 더 안정적인 임금노동 영역에 머물 기회를 주자는 뜻이다. 고용 연장과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부 지원, 신중년 적합 직무에 고용장려금을 주는 정책 등 기존에 시행하는 제도의 실효성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다. 손 부연구위원은 “중고령층을 최대한



중고령 대상 창업·컨설팅·폐업 정책

- | | |
|-----------------|---|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 • 40세 이상 퇴직자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지원 |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 • 40세 이상 경력관리와 능력개발 지원 |
|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 • 40세 이상 창업 지원 |
| 세대융합 창업지원사업 | • 시니어와 청년 아이디어 매칭 창업 희망리턴파키지 |
| 재창업 패키지 | • 폐업 예정 소상공인 임금 노동자 전환 지원
• 폐업 소상공인 전문교육과 멘토링 지원 |
| 역량 점프업(Jump-Up) | • 경영애로 소상공인 컨설팅 |
|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 • 전문인력 활용해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 신사업 창업 지원
• 소상공인 경영 |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
• 설치·운영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
• 소상공인 폐업 시 공제금 등 지원 |

(자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노동 영역에 계속 머무르도록 하는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금노동 영역에서 나온 이후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기술과 자본 없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중고령층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고용 유지’ 다음 정책으로 ‘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꼽히는 이유다. 현재 정부는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컨설팅, 자금지원,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정책이 얼마나 효

과적인지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중고령 자영업자는 다른 연령대 보다 실패를 만회하기 쉽지 않다. 사회안전망 강화도 중요한 숙제다. 자영업자는 직장에 소속된 ‘임금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우산 아래 서기 힘들다. 정부는 자영업자도 원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해 6월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는 1만7922명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하다. 자영업자의 뜻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 산재보험 가입자 수도 2017년 말 기준 2만1692명에 그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는 ‘자기 고용노동자’로 소비자 등에 고용된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국가가 분산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사회보험체계의 근본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가에서는 자영업자에게 맞는 사회보장제도 구축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세종=전슬기 정현수 기자

sgjun@kmib.co.kr

프랑스, 임금노동자·자영업자 위한 사회보장제도 통합 운용

스페인, 임금노동자가 갖는 권리 대부분을 자영업자에게도 보장

자영업자가 전체 노동시장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자 각국은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고 있다. 특히 온전히 자신의 사업을 꾸려나가는 ‘독립 자영업자’ 외에 특수형태고용직노동자 같은 ‘준종속 근로자’, 프랜차이즈 기맹점주 같은 ‘종속적 자영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자가 생겨나면서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정비하는 중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1일 발간한 ‘외국의 자영업자 사회법제 연구’에 따르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따로 운용하던 프랑스는 지난해 두 제도를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임금노동과 자영노동을 구분하는 전통적 관점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노동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경기변동에 따른 폐업 위험 등을 감안하면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종속적 자영업자처럼 계약관계에서 ‘을’의 지위에 놓인 자영업자는 임금노동자로 간주해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적용을 두텁게 만들고 있다.

한국 역시 2012년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특수형태고용직노동자(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를 포함해 요건을 갖추

지 못한 자영업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특수형태고용직노동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노동연구원 박제성 연구위원은 “독립 자영업자의 경우 한국도 제도가 꽤 잘 갖춰져 있지만 특수형태고용직노동자에 대해서는 부족한 편”이라며 “해외에서는 특수형태고용직노동자를 임금노동자와 가깝게 보는데, 우리는 독립 자영업자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25%에 이르는 이탈리아는 특수형태고용직노동자처럼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지대에 있는 준종속 근로자를 탄탄하게 보호한다. 준종속 근로자라는 개념을 1973년

주요 국가의 자영업자 사회보장 제도	
국가	내용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구별해 운영 -2018년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를 임금근로자 사회보장제도와 통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보장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7년 노동기본법과 별도의 ‘자영노동법’ 제정 -노동3권 등 자영업자에게도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권리 인정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 별도로 운영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업자 등 고위험군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3년 민사소송법 개정 통해 ‘준종속 노동자(한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 개념 도입 -2000년 자영업자에게도 산재보험 확대하고 독립 자영업자는 임의가입, 준종속 노동자는 의무가입 -2015년 준종속노동자 적용되는 별도의 고용보험제도 도입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정법에 도입했다. 2015년 노동법을 개정하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고용보험제도도

만들었다. 2000년에는 자영업자도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고, 준종속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스페인은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사회적 보호를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노동3권을 비롯해 임금노동자가 갖는 권리들 대부분이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된다. 2007년 제정된 자영노동법에는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업자’라는 새로운 범주가 만들어졌다. 이들 준종속 자영업자에게는 단체협약 체결권, 법정연차휴가권,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한 보호, 산재보험 의무가입 등이 적용된다. 사회보장제도는 임금노동자와 별도로 운영한다. 질병·모성·장애·노령·사망 5가지 위험에 대한 보험은 의무가입이다. 실업과 산재에 대한 보험은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고액·상습 체불 82% ‘30명 미만’

고용부, 근기법 따라 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 … “경기상황 반영”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대부분이 30명 미만 사업장이고 제조·건설업 종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했다.

고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암치치료재단 헬스피아요양병원(서울 강동) 박전복씨가 9억5338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했다. 이어 황인섭 데코컨설턴트(서울 관악) 5억9966만원, 이준영 건창씨피에스(서울 서초) 4억6007만원, 이정훈 김해고려병원(경남 김해) 4억89만원, 정태옥 한길종합관리(경기 수원) 3억449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 중 1억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43명(17.8%)이었다. 규모별로는 5명 미만 43.0%, 5~29명 39.3%로 30명 미만 영세사업장이 82.3%나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전체의 63.7%로 제조업(81명)과 건설업(73명)이,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41.3%)과 부산·경남·울산권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고액·상습 체불사업주(규모별)

사업장 규모	명단공개		신용제재	
	명	%	명	%
계	242	100	419	100
300명 이상	1	0.4	1	0.2
100~299명	4	1.7	3	0.7
30~99명	16	6.6	20	4.8
5~29명	95	39.3	164	39.1
5명 미만	104	43.0	191	45.6
미상	22	9.1	40	9.5

*출처: 고용노동부

(17.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상황을 반영해 제조업과 건설업종에서 임금체불이 많았다”며 “조선·자동차산업 불황에 따라 부산·경남·울산 지역에서 임금체불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명단공개 사례에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사업주도 있었다. 조경업을 하는 조 모(경기 평택)씨는 범행에 쉬운 노인들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도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

았다. 오히려 나중에는 임금지급을 빌미로 일을 강요해 피해를 확대시켰다. 피해규모만 50여명에게 5156만원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공개·신용제재 요건은 명단공개(신용제재)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다.

고용부는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자 확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부터 올해 3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 그 결과 소명기간 동안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은 2022년 4월10일까지 3년 동안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지방 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명단공개·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해 임금체불 사업주가 산업현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ghan@naeil.com

취업전선 뛰어드는 여성 늘고… ‘그냥 쉬는’ 남성 역대 최다



여성 전업주부 수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결혼·출산·육아 때문에 일을 접었다가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여성들이 많아진데다, 요양·돌봄 등 여성 중심의 서비스업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조업 침체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그냥 쉬는’ 남성은 크게 늘었다.

1분기 여성 전업주부 9만명 감소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비(非)경제활동인구(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중 육아나 가사 때문에 경제활동(취업 또는 구직)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 여성은 1년 전보다 8만8,000명 감소한 70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2008년(702만명) 이후 11년 만에 가

1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조사

- 아이돌보미 등 일자리 증가
- 40대 여성 고용지표는 부진
- 그냥 쉬는 남성 167만 넘어
- 제조업 고용 부진 원인인 듯

장 낮은 수치다. 통계상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두 가지다. 전업주부들이 ① 구직을 하지 않는 이유를 종전의 ‘육아·가사’ 대신 ‘그냥 쉬었다’ ‘학원에 다녔다’로 바꿔 답했거나(비경제활동인구 내 이동) ② 구직을 시작해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로 넘어간 경우다. 통계청은 ②에 무게를 둔다. 실제 1분기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약 1,178만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특히 30대와 50대 여성에서 경제활동 참여 흐름이 뚜렷하다. 노인 일자리 증가의 영향을 받은 60대를 제외한 여성들 가운데 1분기 경제활동 참여율(인구 대비 취업·실업자 비중)이 1년 전보다 상승한 연령대는 30대(62.1→62.8%, +0.7%포인트)와 50대(63.7→65.2%, +1.5%포인트)뿐이다. 두 연령대의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도 각각 0.3%포인트, 1.1%포인트 올랐다. 반면 40대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0.8%포인트(67.2→66.4%) 감소했고 20대(64.6%)는 제자리걸음이었다.

여성 전업주부 감소 배경은 복합적이다.

먼저 시간선택제 일자리, 보육 인프라 확대 등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일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아이돌보미·가사도우미·간병인 등 여성 인력 수요가 많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작년 1~10월 여성 취업자 증가분(9만4,000명) 중 약 60%(5만 6,000명)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됐다. 정부연구위원은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운) 50대 여성들이 소득 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고 있다”며 “다만 만혼 등으로 육아 부담이 가장 커진 40대 여성의 고용지표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말했다.

그냥 쉬 남성 역대 최대

반면 지난 1분기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8만7,000명 늘어난 588만6,000명이었다. 1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이들 중 ‘그냥 쉬었음’이라고 답한 남성 또한 167만3,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42만9,000명)보다 약 4배 많다. 이는 제조업에서 고용이 부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8,000명 감소하며 작년 4월 이후 12개월 연속マイ너스(-)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남성 취업자 중 제조업 비중이 확실히 높기 때문에 제조업이 부진하면 비경제활동인구(쉬었음 혹은 구직 단념자)나 실업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장관까지 나섰지만…‘임단협 접점’ 못찾는 르노삼성 노사

**노동강도·외주화·전환배치 놓고
회사 “협의” 노조 “합의” 맞서
이 장관 방문해 타결 당부도 허사
닛산 위탁물량 일부 일본으로 돌려
지역경제계 “조속히 합의해야”
노사, 16일 교섭 재개할 예정**

임·단협을 둘러싼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계 안팎의 우려에 고용노동부장관까지 현장을 찾았으나 돌파구를 열지 못했다. 생산 차질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자 르노삼성에 생산을 위탁한 닛산이 맡긴 물량 일부를 빼가는 등 후유증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1일 오후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을 찾아 노사를 차례로 만났다. 노사 관계가 악화하면서 부품업체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원만한 타결을 당부했지만, 노사는 이날도 이견을 좁힐지 못했다.

노조는 사쪽 협상 대표인 이기인 제조본부장(부사장)이 지난 9일 교섭장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10일 주·야간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12일에도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사쪽의 협상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르노삼성 노사 갈등의 핵심은 외주화와 전환배치, 노동강도 문제 등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사쪽은 이를 ‘협의’ 사안으로 해결하자는 자세이지만, 노조는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하기 위해선 ‘노사 합의’로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사쪽은 전환배치 문제를 노사 합의로 하는 것은 인사·경영권의 침해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비정규직을 늘리는 외주화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한 곳은 르노삼성이 유일하다. 지난 2011년 적자를 낸 르노삼성은 2012년 구조조정 등을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흑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해 출범한 노조 새 집행부는 생산라인 직원들이 감내해온 노동강도 등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재정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부산공장에선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7개 차종을 혼류 생산하고 있는데 많은 조합원이 작업장의 노동강도가 너무 세

다고 토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공장에서 위탁 생산 중인 닛산 스포츠실용차(SUV) ‘로그’의 후속 물량 등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금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준의 임·단협을 맺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사쪽과 부닥치면서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부분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사 대립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르노삼성은 생산 차질과 판매 하락, 수주 물량 축소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르노삼성의 지난 1분기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로 줄어들었다. 지난달에는 닛산이 생산을 위탁한 로그 물량 10만대 가운데 2만4천대를 일본 규슈공장으로 돌렸다. 회사 쪽은 “파업이 계속되면 내년부터 부산공장에서 생산할 신차 ‘XM3’의 수출 물량 확보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르노삼성은 물량 조절을 위해 이달 말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부산공장 근무 형태를 현행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는 “3년째 이어지던 르노삼성의 무분규 협상이 깨지고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협력업체의 절반이상이 몰린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노사는 오는 16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르노삼성 “29일부터 5일간 가동 중단”

노조 장기파업에 ‘단체휴가’ 지정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르노삼성자동차가 4일간 ‘단체 휴가’를 강행한다. 또 낫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로그’의 생산 차질로 2만4000대의 생산 물량을 낫산 일본 규슈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11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이달 29, 30일과 다음 달 2, 3일 공장 가동을 멈추기로 하

고 이를 노조와 부산공장에 통보했다. 회사가 법정 연차 외에 복지 차원에서 제공했던 ‘프리 미엄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까지 포함하면 5일 연속 문을 닫는 셈이다.

앞서 르노삼성 사측은 노조 파업 시 단체 휴가를 강행하겠다고 맞섰다. 하지만 노조가 결국 10일 파업을 강행했고 회사 측도 단체 휴가 지정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어차피 생산할 물량도 떨어지고 있고, 노조가 언제 파업을 할지 모르니 단체 휴가라도 써서 협력업체에 생산 예측 가능성이라도 높여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노조가 파업을 하면 파업 시간만큼을 4일 지정 휴가에서 뺀다는 입장이다.

르노삼성은 1분기(1~3월) 파업으로 낫산의 로그 4600대를 생산하지 못했다. 이에 낫산은 올해 위탁물량을 기준 10만2000대에서 4만 2000대 빠진 6만 대로 줄였다. 낫산은 이 중 2만 4000대를 자국 규슈공장에서 만들기로 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매일경제

2019년 04월 12일 금요일 A39면 오피니언

車산업 벼랑끝 위기인데 노조는 딴 세상에 있나

기아차 노조가 해외 전용 모델의 국내 생산을 요구하는 안건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해 빙축을 사고 있다. 미국 모델인 ‘텔루라이드’와 인도에서 만드는 ‘SP2’를 국내 물량으로 돌리라는 것이다. 현지에서 잘 팔리니 한국에서 생산하면 이익이 될 것이라는 말인데 황당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내 공장 생산성이 외국에 비해 낮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차량 1대당 평균 생산시간(HPV)에서 국내 공장은 외국 경쟁사나 해외 현지 공장보다 6~10시간 길었다.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현지 생산 차종을 국내로 들여오라는 것은 떼를 쓰는 것과 같다.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르노삼성차 노조도 마찬가지다. 르노그룹 본사가 물량을 줄이고 낫산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인 ‘로그’ 생산 계약이 오는 9월 끝나는데도 사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며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째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투쟁 강도를 높이기 위해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공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를 위기가 몰려오는데 노조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의문이 들 정도다.

자동차 산업 판도가 친환경과 자율주행차로 바뀌고 차량 공유 시장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선제적 감원에 나서고 있다. GM과 포드, 폭스바겐, 재규어·랜드로버 등은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2만명 가까이 구조조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세계 자동차 수요가 급감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자동차 시장에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올 1분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95만4908대로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현대차 국내 본사는 1974년 상장 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생산 물량이 줄고 파업이 반복되면 연 400만대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402만9000대로 전년보다 2.1% 줄었다.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에 유일하게 3년 연속 감소하며 순위도 멕시코에 밀려 세계 7위로 떨어졌다. 노조는 이런 엄중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위기 극복을 위해 사측과 머리를 맞대고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조와 조합원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카드노조, 총파업 카드 ‘만지작’

알맹이 없는 정부대책에 불만
“혜택줄어 소비자만 피해” 지적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카드업계가 최후의 수단인 총파업을 16년 만에 고민할 정도로 격양돼 있다.

카드업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정부 취지에 발맞춰 영세 사업장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금융당국의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석 달 넘게 기다렸다. 그러나 정작 돌아온 것은 ‘알맹이’는 쑥 빠진 채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스스로 신산업에 진출해 경쟁력을 확보하라’는 맹탕 같은 독려에 불과했다.

카드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축소(3년→2년)와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배율 확대(6배→10배),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제 등이다. 그러나 핵심 요구사항은 쑥 빠지면서 카드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지부장들은 금융위원회가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

놓은 다음날인 10일 금융위 측과 만나 새로운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일방적으로 카드 수수료 정책을 밀어붙이는 금융당국에 대한 항의의 차원으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파업이 시행되더라도 고객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이미 기존의 결제 프로세스가 시스템화되어 있어 고객들의 이용에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KB국민은행 파업 때도 대다수 국민은 몰랐다. 이번에 카드사가 총파업을 시행하더라도 비슷할 것이라 얘기가 나온다. 그럼에도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카드사들이 절박하다는 뜻”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의 대립 속에서 결국 궁극적인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국의 개선안에는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이 담겨 있다. 이는 곧 소비자 혜택 축소를 의미한다.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할인혜택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혜자카드’라 불리는 다양한 혜택이 담긴 알짜 신용카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공산이 크다.

또 하청노동자 ‘비극’

구미산단 내 효성티앤씨
쓰러진 장비에 깔려 숨져

11일 오후 2시30분쯤 경북 구미시 시미동 구미국가산업3단지 내 섬유업체인 효성티앤씨 하청업체 노동자 ㄱ씨(42)가 장비에 깔려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ㄱ씨 등 노동자 4명이 높이 150cm, 지름 60cm인 ‘필터’(섬유 원료 액체를 보관하는 원통형 장비)를 교체하던 중 발생했다. 무게 400~500kg에 달하는 장비가 중심을 잃고 ㄱ씨의 몸 위로 넘어지면서 ㄱ씨의 상반신이 깔렸다. ㄱ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ㄱ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4시쯤 숨졌다. 경찰은 바닥에 고정된 장비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를 옮기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ㄱ씨는 효성티앤씨 내 기계 및 설비 전반을 관리하던 플랜트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일해온 2차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구미고용노동청과 경찰은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또 목격자와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작업의 안전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살핀 뒤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민주노총위원장 경찰출석 불응

‘국회 무단 침입’을 시도하는 등 총 4건의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측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데 김 위원장이 사전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며 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일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12일 출석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에 대해 “12일 당일 상황을 지켜보고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다른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른 조치’에 체포영장 발부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경찰은 당초 김 위원장을 12일에 소환해 지난달 27일 국회 앞에서 벌어진 불법시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후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국회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행렬 맨 앞쪽에 있던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은 경찰을 폭행하고 질서 유지선 차단막을 부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행진 행렬 뒤쪽 차량 위에 올라 사회를 보느라 직접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추후 채증자료를 분석해 김 위원장을 포함한 8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불법시위 외에도 총 3건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지난 3일 발생한 국회 무단 침입 사건에 대해선 체포 당일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당시 집회 도중 영상취재를 하던 MBN 기자가 폭행·폭언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체포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당일 전원 석방해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희수 기자

2019년 04월 12일 금요일 009면 종합

〈4월11일〉

‘임시정부 수립일’ 국경일 될까

박광온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9월17일 ‘광복군 창설일’ 격상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4월11일)과 광복군 창설일(9월17일)이 국경일로 지정될 수 있을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두 기념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국경일로 정해놓은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에 더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국경일로 추가하는 것이다. 또 10월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바꾸고 이를 국경일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해묵은 ‘건국일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시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제는 의도적이고 소모적인 건국일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은 설연휴 3일 등을 포함해 총 15일이다.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 민간기업 노동자에게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추가 국경일 지정은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물 가운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친일행위자의 묘지 옆에 친일 행적을 설명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11명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2019년 04월 11일 목요일 015면 산업

한전, 강원산불 10억원 성금

종합지원·안전대책 발표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강원 산불에 대한 10억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산불 피해복구 종합지원과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한전은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구호활동, 숙소제공, 의료제공 등 다양한 방면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시행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산불 발생 직후 속초지사에 비상

상황실을 설치하고 자체 운영중인 119재난구조단과 사회봉사단 등 60여명을 피해가 가장 큰 속초시 장천 마을에 파견해 구호물품을 신속히 전달했다. 이재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한전 속초연수원 전 객실과 식당, 의무실 등 부대시설도 개방했다.

한전은 전력그룹사와 함께 피해복구 성금 10억원을 기탁했으며, 이와 별도로 노사합동으로 전 임직원이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추진하고 있

다. 성금기탁과 모금활동에는 한전과 6개 발전회사(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4개 그룹사(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 연료)가 동참했다.

한전 의료재단인 한일병원은 구호의약품을 지원했으며, 9일부터 전문의료지원단이 '찾아가는 이동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매일경제

2019년 04월 12일 금요일 A30면 부동산

LH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6월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적용 대상 건설 현장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건설 현장 출입구, 가설식당, 안전교육장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체크카드 겸용 전자카드를 사용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LH는 당초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 현장, 2019년 1

월 이후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적용 대상을 확대해 1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발주 기준을 300억원 이상 공사 현장과 동일하게 2018년 7월 이후로 변경해 28개 건설 현장에 추가로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신규 발주할 예정인 159개 건설공사에도 전자카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윤예 기자

정부 공시지가 비판했다고… 공기업 노조가 명예훼손 고소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 교수 향해
감정원 노조 “우릴 비전문가라니”
학계 “비판했다고 학문 위축시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해 온 대학교수가 공시가격 담당 공기업인 한국감정원 노조로부터 고소당했다. 비판적 발언으로 감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학문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한국감정원과 학계 등에 따르면 감정원 노조는 이달 8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정수연(사진)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를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구는 감정원 본사 소재지다. 정 교수는 아시아부동산학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부동산 가치 평가 분야 전문가다.

노조는 “정 교수가 각종 언론 인터뷰, 정책 토론회 등에서 감정원을 비난하는 발언을 해 조합원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발언이 담긴 문서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다. 노조가 문제 삼은 발언은 “공시가격을 감정평가사 아닌 비전문가(감정원 직원)들이 매기다 보니

오류가 많다”, “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납세자들은 뭐가 문제인지도 알기 어렵다”, “감정원이 조사하는 주택 실거래가에 투기 거래, 친인척 간 거래 등 비정상적 거래가 포함돼 있어 부정확하다” 등이다.

정 교수는 “감정원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발언 모두 연구의 결과로, 다른 교수나 업계 전문가, 언론도 지적하던 문제”라며 “소신껏 말했을 뿐인데 소송에 휘말리다니 안타깝다”고 했다. 노태욱 한국감정평가학회장(강남대 교수)은 “학자의 연구 결과가 비판적이라고 위축시키려 드는 것은 정부를 대행하는 공기업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내고 “과거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학자를 수자원공사 직원이 고소한 것을 두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노조 자체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감정원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간단하지 않네

의무화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의료·보험업계 10년 갈등 재점화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여부를 놓고 다시 맞붙고 있다. 지금은 환자가 진료내역서 등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전산으로 진료기록을 보내 보험금이 자동 청구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 소비자 보호·권익 내세우며 여론전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은 병원 등 의료기관이 전산화된 진료내역을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보내고 심평원은 다시 이 정보를 각 보험사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심의가 속도를 내면서 의료업계는 연일 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보험사가 자동 청구를 통해 소비자의 진료기록을 쌓아 나가면,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 근거가 많아진다”며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

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편의성을 높이려다가 자칫 소비자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민간보험인 실손보험금 청구를 의료기관에 부담도록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는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일

의료계 “보험금 덜 주려는 꼼수 병원이 청구하는건 부당” 반발

보험업계-소비자단체는 환영 “가입자 편하고 보험사기도 걸러”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험업계는 진료자료를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 문서로 전송하면 병원이나 보험사 모두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환자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진료정보를 심평원이 중개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 보험업계, 의료계 과잉진료 차단 목적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두 업계의 속내는 더 복잡하다.

보험사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손해율이 오를 수 있다. 소비자들이 귀찮아서 포기했던 소액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에 따른 손실보다 보험금 자동 청구가 병원의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걸러내는 효과가 더 크다고 기대한다. 진료기록의 전산화 과정에서 병원마다 다른 비급여 진료의 코드가 표준화되기 때문에, 의사가 진료비를 부풀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의료업계는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정부나 보험사가 실손보험의 진료수가를 통제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평원이 실손보험금 청구에 개입하면 정부가 병원들의 값비싼 비급여 진료비를 들여다볼 수 있고 이는 진료수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의료계의 고민이다.

전문가들은 의료계의 우려 사항을 보완해서라도 청구 간소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 한다. 김두철 상명대 금융보험학부 교수는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보험사기 등을 걸러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